

[토론]

환경·기후 그리고
‘짧은 공급사슬’에 대한 관심,
다기능 농업 확산 등에 덧붙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기후 그리고 ‘짧은 공급사슬’에 대한 관심, 다가능 농업 확산 등에 덧붙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이에른 주에서 일어나는 농업 및 농업정책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신 자료를 잘 읽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토론에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선 발표 자료를 통해 제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발표자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물론 EU의 공동농업정책과 회원국 농업정책의 강조점이 환경(또는 기후변화 대응), 종래의 농산물 유통경로와는 다른 ‘짧은 공급사슬(short chain)’ 모색, 농업생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농업 생산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편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농업 즉 다가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촉진 등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당연히 유럽 차원의, 아니 지구적(global) 수준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문제 인식은 있으나, 농업정책이 대응하는 방식은 독일 바이에른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듯합니다. 배경이 다르므로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토론을 통해 교훈을 얻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농업의 상황 중 요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다가능 농업을 강조하는 논의 자체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단순히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생산에만 그쳐도 된다고 보기에는, 사회 각 부분의 변화 폭과 그로 인한 농업 부문에 대한 압력이 작지 않습니다. 이제는 환경(혹은 문화경관)을 돌보는 데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영농이 바뀌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사에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농업경영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도 일정한 수준의 ‘농업 활동 기반’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30년 사이에 전국 농지의 25%가 사라졌습니다. 농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에 한정하자면 4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면적은 52만 ha로, 서울시 면적(65,000ha)의 9 배에 가깝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농지 감소 추이를 보면 대략 4~5년 사이에 서울시 정도 면적의 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도시 건설, 공장용지 확보 등 비농업 분야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의 농업적 이용 방식을 조정하여 환경 보전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주장을 하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대로 가면,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방식의 농업을 확장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젊은 농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전국 100만 농가 중 가구주 나이가 20대이거나 30대인, 즉 청년 농가의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한국 농업의 위기를 표상합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이란 ‘땅과 사람’의 상호작용 또는 결합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땅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기능 농업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 비교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농지 면적과 농업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농정의 근본 토대가 되리라는 점은 동일 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스치듯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바이에른에서도 농지가격이 2014년 이후로 꽤 크게 상승하여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땅과 사람’, 즉 농지와 농업인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문제에 관해 농민들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으며 농정 당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씀하신 농정의 강조점 변화에 대해 현재 농사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문화 경관보전 등과 관련해 주 정부와 농부의 ‘협약(contract)’ 구조하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상세한 틀을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 정부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협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집합성을 지닌 단체(가령, 농민단체)가 주 정부와 협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경관이나 자연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활동은 필경 개인들만의 개별 활동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요인들이 꽤 있을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